

# AI 시대 한국 언론의 'AI 포획'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언론 자율성 침식 위험과 규범적 대응의 방향 -\*

최 영 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포털 플랫폼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경험한 한국 언론이, 생성형 AI 기반의 뉴스 생태계 전환기에도 유사한 플랫폼 종속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AI 포획'이라는 개념적 틀로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디지털 혁신의 실패로 자율적 기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국 언론이 외부 AI 모델·데이터·인프라에 의존할 경우, 편집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스티글리츠(Stiglitz, 2017)의 미디어 포획론과 네슈타이(Nechushtai, 2018), 사이몬(Simon, 2022)의 인프라 포획 논의를 바탕으로 AI 포획의 개념적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기존의 포털 포획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한국 언론이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종속의 경로와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규범적·제도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언론이 기술 인프라에 종속되는 'AI 포획'의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를 효율화 도구가 아닌 탐사보도·팩트체크·데이터 분석 등 양질의 저널리즘과 민주적 책무를 강화하는 '규범적 활용'의 대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과제사업비(HRF-202505-00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yjchoi@hallym.ac.kr

공영·공동형 LLM 구축을 통한 기술 인프라 자립과 데이터 주권 확보, AI기반 뉴스콘텐츠 혁신 전략과 기자·편집자의 AI 리터러시 향상 등 조직역량 강화, 공정한 저작권·라이선스 체계 확립과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AI 기반 뉴스 생태계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언론 자율성과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재설계할 결정적 시점이다. 향후 연구와 정책은 AI 기술이 언론의 자율성을 침식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정보 질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범적 AI 활용’과 ‘언론 자율성 보호’의 이중 전략을 구체적 정책과 제도 설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AI 포획, 인프라 포획, 저널리즘 자율성, AI 저널리즘, 포털 플랫폼 포획, 언론 윤리, 규범적 대응

## 목 차

- I. 서론
  - 1. AI 시대, 세계 언론사들의 AI 도입 과정과 해결과제
  - 2. 한국 언론사들의 AI 도입 과정과 문제점
  - 3. 한국 언론의 'AI 포획' 위기 가능성 탐구
  - 4.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포털 포획'에서 'AI 포획' 시나리오와 대응방안
- II. AI 뉴스생태계에서 언론의 'AI 포획' 문제
  - 1. 포획 이론(capture theory) 검토
  - 2. 'AI 포획'과 '포털 포획' '미디어 포획'의 차이점
  - 3. 언론사들의 AI 포획 심화 vs.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
- III. 'AI 포획'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규범적 대응 전략
  - 1. '포획' 이론 vs. '규범' 이론
  - 2.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AI 기술의 규범적 활용 모색
  - 3. 언론 조직의 협상력 제고와 콘텐츠 혁신 전략
  - 4.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AI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
- IV. 결론

## I. 서론

### 1. AI 시대, 세계 언론사들의 AI 도입 과정과 해결과제

'AI 시대'가 보통명사가 될 정도로 교육, 법조, 경영, 금융, 의료, 문화 산업, 군사, 전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태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해당할 만큼 AI 전환(AI transformation)<sup>1)</sup>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sup>1)</sup>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조직, 또는 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AI 전환은 디지털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자동화,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NLP) 등 다양한 AI 기술을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문화와 역량 강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Wilson & Daugherty, 2018).

2022년11월 생성형AI인 챗GPT의 등장 이후 엄청난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보인다.

언론분야도 뉴스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병행하여 다양한 AI 전환(AI transform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대학의 ‘Journalism AI’ 프로젝트 그룹이 2023년 전 세계 46개국 10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뉴스룸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AI 기술을 실험해 본 기자를 포함하면 85%에 달했다(Beckett & Yassen, 2023).<sup>2)</sup> AI가 소규모 언론사부터 글로벌 조직까지 취재와 뉴스 제작, 유통 과정 전반에 영향을 확대하면서 “이제 저널리즘은 AI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천현진, 2023).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 생산, 배포, 소비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저널리즘의 AI 전환의 이론적 토대는 자연어 처리(NLP), 머신러닝,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 등의 기술이 저널리즘의 전통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Ioscote, Goncalves, & Quadros, 2024; Hansen, Roca-Sales, Keegan, & King, 2017).

인공지능은 전 세계 저널리즘의 구조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sup>3)</sup>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언론사

2) 응답자의 25%는 AI 기술의 도입이 뉴스룸의 작업 과정과 구성원들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AI는 비용 절감, 프로세스 간소화 및 사실 확인,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콘텐츠 배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AI는 기자들이 더 복잡한 편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재배치를 가능하게 했고, 일부 언론사는 AI 관련 새로운 역할을 하는 직종을 만들었고, 데이터 분석에 관한 AI 활용 기술 훈련을 통해 기존 역할을 강화하기도 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사는 전반적으로 기자들의 AI 문해력 향상과 함께 AI와 관련된 새로운 채용 기준이 도입됐다. AI 활용 초기 단계에 있는 언론사의 구성원들도 AI로 인해 뉴스룸에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Beckett & Yassen, 2023, pp.28-31).

3)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The Reuters Institute)가 2004년 11월과 12월, 전 세계 51개국의 전통 또는 디지털 언론사의 CEO, 편집국장, 디지털담당국장 등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들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중심으로 뉴스 생산, 유통, 조직 운영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Newman & Cherubini, 2025). 세계 언론사들의 가장 광범위한 AI 활용 영역은 백엔드 효율화(back-end efficiency)<sup>4)</sup>와 업무 자동화로, 전체 발행인의 96%가 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개인화와 추천 시스템(80%), 콘텐츠 생성(77%), 데이터 저널리즘 및 탐사보도(73%)가 주요 분야로 꼽힌다. 일부 언론사는 AI를 코딩(67%)이나 광고 제작 활용(63%)에도 적용하며, 편집과 배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는 '교차 기능 AI팀(cross-functional AI teams)'을 운영하며 기술 실험과 조직문화 변화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의 JP/Politikens Media Group은 MAGNA 시스템을 통해 기사 초안 작성, 교정, 스타일 조정 등을 자동화하였고, 핀란드의 Helsingin Sanomat은 번역, 데이터 분석, 자동 타임라인 구축 등 뉴스 수집 및 연구 지원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AI는 또한 탐사보도와 데이터 저널리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언론사의 콘텐츠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sup>5)</sup> AI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언론사들은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형식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음성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기사를 다국어 및 다양한 음성 톤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기사 상단의 AI 요약, AI 챗봇 및 AI 검색 기능, 텍스트 기사의 영상 전환 등이 앞다투어 도입되고 있다. 한편, AI 기반 브라우저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이 스스로 기사를 요약, 재구성, 재포맷할 수 있게 되면서, 뉴스 콘텐츠의 주도권이 언론사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음성 인터페이스

4) '백엔드'는 뉴스 제작의 후방 시스템을 뜻하며, AI가 주로 투입되는 영역은 데이터 처리, 콘텐츠 관리, 편집 지원, 유통 관리, 독자 분석, 아카이브 관리 등을 의미한다. '백엔드 효율화'란 이들 과정에서 시간·비용을 줄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기술적 최적화 작업이다.

5) 2024년 풀리처상은 최초로 AI를 활용한 기사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는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 실태를 AI 기술을 이용해 탐사보도한 New York Times의 출품작이 포함되었다.

스 기술의 발전으로 대화형 뉴스 인터페이스가 시도되고 있고, 구글의 Gemini, 오픈AI의 ChatGPT, 애플의 Siri, 그리고 아마존의 Alexa가 지원하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코드 등의 멀티모달(multimodal) 시스템을 기반으로 멀티모달 뉴스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2025년 주목할 만한 기술적 발전 중 하나는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s) 혹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gent AI)의 급속한 진화이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목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AI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뉴스 생산의 주체·과정·책임 구조 전체를 재정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Simon, 2024).

전 세계 언론사들이 AI 기술을 앞다투어 채택하는 이유는, 뉴스 산업이 점증하는 사업적 압력과 사회적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때마침 나타난 AI 기술이 효율성의 제고, 수익의 증대, 더 깊은 통찰력, 그리고 창의성의 향상을 약속하는 기술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Newman, 2023). 동시에, 기술의 미래적 중요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혁신에 대한 압력이 결합되면서, 뉴스 조직들이 ‘동료 조직(peers)’의 행동을 모방하게 됨으로써 언론사들의 AI 도입 과정과 형태는 동형화(isomorphism)하는 경향을 보인다.<sup>6)</sup> AI 기술의 발전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크며, 많은 언론사들이 AI에 대한 목표 설정(goal definition)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 AI의 본질과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호함이 커질수록, 조직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성공한 조직들의 행위를 모방(emulate)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사들의 AI 도입 동기, 도입 과정, 그리고 AI 윤리 강령까지도 동형화하는 경향이 있다(Becker et al., 2025).

6)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을 수립한 디마지오와 파월(DiMaggio & Powell, 1983, p.156)은 “특정 분야(field) 내에서 기술이 불확실하거나 목표가 모호할수록, 동형화 변화(isomorphic change)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고 주장하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세계 언론사들의 AI 도입은 아직은 실험 단계적 성격이 강하다. 언론사들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 비용 절감이나 수익 창출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많은 언론사들이 AI를 '효율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 중이지만, '핵심 저널리즘 가치와 조직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언론사의 AI 도입에는 규범적 윤리적 여러 문제점이 공존한다. 첫째, 윤리적·법적 불확실성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 불투명성과 저작권 문제, 그리고 자동화된 뉴스 생산 과정과 결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저품질 생성물(AI slop)의 확산 위험이다. 오픈AI의 Sora와 같은 텍스트-영상 변환기의 대중화는 초현실적 합성 콘텐츠를 양산하며, 허위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언론사의 편집권과 데이터 주권의 약화이다. 플랫폼 기업과 기술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규제권한이 약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독립, 책임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밖에도 AI 도입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조직 불평등의 심화도 문제다. 대형 언론사는 자체 AI팀을 운영할 여력이 있으나, 중소 언론은 비용·기술·인력 면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의 AI 도입은 혁신의 진전과 규범적 혼란이 병존하는 단계에 있으며, 기술 효율성과 저널리즘 가치 간의 균형적 재구성이 핵심적인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 2. 한국 언론사들의 AI 도입 과정과 문제점

전 세계 언론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저널리즘 생산과 운영 전반에 적극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언론사들의 AI 활용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 언론이 백엔드 효율화, 개인화 추천, 자동 요약, 탐사보도 지원 등 편집·경영 통합형 AI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국내 언론은 주로 기사 작성 보조나 속보 자동화

등 제한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다수 언론사는 ‘뉴스봇’이나 자동 헤드라인 생성기, 음성 변환 서비스 등 단일 기능 중심의 실험적 프로젝트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해외 언론은 AI 활용의 규범적·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한 반면, 한국 언론계는 AI 저널리즘 윤리 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일관되게 확립되지 않았다(이현우 외, 2024).

국내 언론사에서 AI 저널리즘 형태 구현은 연합뉴스가 2023년 현재 27개 AI 뉴스 서비스를 실현할 정도로 가장 활발하다. 기상특보, 지진 자연재해 기사 생성, 스마트카와 같은 플랫폼으로 차량용 AI 뉴스 서비스 개발, LLM 고도화 개발을 통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뉴스텍스트 생성, 기사 추천 시스템, 취재 도와주는 agent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김태균 외, 2019). 영남일보는 한국의 신문사 중 최초로 ‘AI 이미지 생성 솔루션’을 개발하여, 텍스트 기반의 기사를 시각화하여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잔인한 사건,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며 상황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 제작에 AI를 활용한다<sup>7)</sup>.

조선일보는 ‘조선 AI 기사 작성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사 5만 건을 학습해 만들어진 어시스턴트는, 기자들이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입력하면 10초 내에 조선일보 스타일의 기사를 생성한다.<sup>8)</sup> 강원도 춘천지역 언론사 MS투데이는 2023년 7월부터 AI를 활용하여 기사와 첨부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시사적인 뉴스보다는 건강 상식, 생활 정보, 날씨 등 실용적인 정보 제공 기사

7) AI 이미지 생성 프로젝트 기획자는 지역 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시도는 의미 있었으나, 실제로 일선 기자의 참여는 저조했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건 일선 취재기자들이 아직 AI 이미지 생성기 활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솔직히 기자들을 위해 개발하고 기자들이 활발히 이를 사용해 웹 서비스 강화→새로운 웹 독자 유입을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제작 기자들이 무관심하니 매우 답답하다.”(박종문, 2023, p.99)

8) 조선일보 AI 뉴스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AI기사 작성 어시스턴트는 경력 2년 이하 저년차 기자들은 이용 금지시키고 있으며, 실제 기자들의 이용도는 예상 보다 빈번한 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에 챗GPT를 활용한다. 또한 전국의 지역방송사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한국일보는 국내 언론사로서 처음으로 AI 뉴스 윤리강령도 만들고, 보도자료를 이용한 간단한 기사 작성 앱도 개발했으나, 실제 기사 작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AI 외국어 번역 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일어, 중국어 온라인판을 제작하고 있으나, 아직 번역 오류가 발생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자들의 AI 활용 실태 조사 결과(박아란 외, 2025, pp.100-158)에 따르면, 기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뉴스 생산 과정에서 AI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 동기는 '언론의 발전'보다는 '개인 업무 효율성 향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서적 소진과 냉소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성형 AI 활용 의도가 커지는 경향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으로 해석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허용된 업무는 녹취록 변환, 외국어 번역, 문법 교정 등 기술적 지원 영역이며, 향후에는 기사 요약, 재편집, 외국어 송출, 이미지나 그래프 제작 등 부속 콘텐츠 생성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언론인 다수는 AI가 취재 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특히 초벌 기사 작성의 AI 의존, 글쓰기 능력 저하, 현장취재 감소 등이 대표적 위협으로 지적했다.

결국, 한국 언론의 AI 활용 형태는 기술적 도입 속도는 뒤늦게 민첩한 편이지만, 조직적 전략과 윤리적 성찰이 미흡한 '기술 종속형 AI 저널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다.

### 3. 한국 언론의 'AI 포획' 위기 가능성 탐구

#### 가. AI 시대 언론 위기의 원인으로서는 'AI 포획' 탐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포털 포획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위기를 경험한 한국 언론

이, 인공지능(AI) 기술 중심의 새로운 뉴스 생태계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종속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혁신의 실패로 ‘포털 포획’ 구조에 빠진 한국 언론이, 이제 AI 뉴스 생산 도구와 인프라를 플랫폼 기업에 의존할 경우, 그 종속과 의존의 수준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언론은 이미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직적 전략이나 윤리적 성찰 없이 AI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기술 인프라 포획 구조를 재현하거나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포털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에서 AI 플랫폼 생태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은 포털 포획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AI 포획’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실패로 포털 플랫폼에 의존해 온 한국 언론이 외부 AI 플랫폼(오픈AI, Google, Anthropic 등)의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에 종속되어,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더욱 심층적으로 침식되는 ‘AI 포획’ 위기의 가능성에 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스티글리츠(Stiglitz, 2017)와 네슈타이(Nechushtai, 2018), 사이몬(Simon, 2022)의 ‘미디어 포획(Media Capture)’ 관련 이론을 토대로, AI 포획의 개념적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 언론의 AI 포획 과정 시나리오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언론이 ‘기술 인프라 포획’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언론 규범과 자율성을 정립할 수 있는 조직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했다.

‘언론의 포획(media capture)’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정치권력, 시장, 기술 등에 종속되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tiglitz,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론의 AI 포획’은 언론이 인공지능(AI) 모델·데이터·알고리즘·기술 인프라 등 AI 중심의 기술 환경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편집 자율성과 사회적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AI 포획'은 기존의 정치·경제 권력에 의한 포획과 달리, 기술 인프라·알고리즘 시스템·플랫폼 구조가 뉴스의 생산·배열·유통까지 관장한다는 점에서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al capture)'(Nechushtai, 2018) 또는 '플랫폼 포획'의 성격을 기술적으로 확장한 형태로 이해된다.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유통 채널을 장악해 온 상황에서 AI 기술이 뉴스 제작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언론의 기술 의존도는 심층적으로 강화되고 그 결과 편집권·데이터 주권·윤리적 판단 영역이 외부 기술 구조에 의해 제약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Simon, 2022).

AI가 뉴스의 질과 공적 담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AI 중심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론 조직의 생산 역량과 공공적 목표를 제약하며 경제적·기술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Simon & Isaza-Ibarra, 2023). 이러한 관점에서 'AI 포획'은 AI 시대 언론 위기를 설명하는 새로운 구조적 원인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 나. 한국 언론의 '포털 포획' 과정과 결과

한국 언론은 AI 기술 등장 이전부터 이미 사실 보도, 공정·객관 보도, 권력 감시 등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며 신뢰도 하락, 파행적 언론 시장과 만성적 경영난, 언론인 정체성 위기 등 구조적 위기를 겪어왔다. 한국 언론의 위기에 관한 구조적 원인은 권력 포획, 시장 포획, 기술 포획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온라인 기술 환경에서 한국 언론의 위기는 '뉴스콘텐츠의 디지털화' 실패와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포털 플랫폼 포획'의 결과로 나타났다(최영재, 2024, pp.205-214)<sup>9)</sup>.

9) 최영재(2024)는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위기적 현상은 권력·시장·기술의 삼중 포획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첫째, 정치권력 포획은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통제 전통과 민주화 이후의 정파적 대립 구조 속에서 언론이 정권과의 유착·적대의 악순환에 갇힌 결과이다. 둘째, 시장 포획은 광고 의존, 자본 통합, 불공정 경쟁 등으로 인해 언론이 자본과 광고주에게 예속되어 공공성보다 생존을 우선하는 상업주의에 빠진 현상을 말한다. 셋째, 기술 포획은 포털과 소셜 미디어 중심의 플랫폼 생태계에서 언론이 뉴스 유통권과 뉴스 가치 결정권을 포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보급과 온라인 기술 시장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 한국 언론이 완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뉴스 디지털화로 인한 신문 구독률 하락, 광고수익 감소, 그리고 온라인 매체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자, 언론계는 종이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김영욱 외, 200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언론산업의 혁신 노력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특히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성공적인 온라인 유료화 모델(조영신, 2014; 이종혁·임종섭, 2012; 김정훈, 2014)과 같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립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뉴스룸 혁신(김영주·정재민, 2011; 황용석·김대경, 2012)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혁신 시도들은 이렇다 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sup>10)</sup>.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의 디지털 전환 노력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혁신보다는 생존을 위한 임시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실패의 결과, 다수의 언론사들은 자율적 혁신 대신 포털의 뉴스 유통시장에 종속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언론사들은 자사 콘텐츠를 포털 알고리즘에 맞게 재가공하고, 클릭 수와 트래픽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털 맞춤형 상품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반 다이크(van Dijck et al., 2018)가 지적한 ‘뉴스의 플랫폼화(news platformization)’ 현상으로, 포털이 언론의 편집권과 게이팅 기능을 대신 행사함으로써, 마치 뉴스가 언론사가 아니라 플랫폼

---

털에 양도함으로써 자율성과 품질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한국 언론은 정치권력의 영향력, 시장의 수익논리, 기술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라는 삼중의 지배 구조에 포획되어,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 10) 중앙일보 등에서 편집국 디지털 혁신을 단행한 사례가 나왔으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양질의 저널리즘 콘텐츠의 유료화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포털에 의존한 뉴스상품 시장과 종이신문의 진지한 뉴스시장을 구분하는 이중시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의 디지털 혁신 노력의 실패 원인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언론 시장구조와 포털 플랫폼에 의한 한국 언론의 포획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직접 생산된 것처럼 인식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결국 이러한 '디지털화'는 표면적으로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기술적으로 현대화하는 과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뉴스 제작과 유통의 권리를 언론사가 아닌 포털 플랫폼의 지배력과 영향력 아래 예측시키는 사이비(似而非) 디지털화였다. 언론사들은 자체 플랫폼 개발과 같은 진정한 디지털 혁신의 기회와 역량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뉴스 유통시장의 통제권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언론이 보유하고 왔던 뉴스 가치의 결정권마저 포털과 이를 소비하는 번덕스러운 대중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언론의 디지털 전환이 자율적 혁신의 경로가 아니라, 플랫폼이 규정한 기술·경제적 질서에 편입되는 '구조적 종속'의 경로로 수렴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포털 종속의 결과, 언론은 더 이상 자율적 매체라기보다 포털 생태계의 콘텐츠 제공업자로 전락했다. 포털뉴스 플랫폼에 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지만, 자체 웹사이트가 축소되면서 시민과의 공론장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었다(송경재, 2021, p.9). 언론은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공간 대신에 포털·SNS 중심의 공론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언론은 포털시장에서 소비되는 '뉴스상품'을 양산하는 '뉴스공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제 설정 기능의 약화, 뉴스의 탈맥락화, 사고의 피상화, 감정적 유대의 확산 등으로 이어졌다(최영재, 2022).

한국 언론의 포털 플랫폼 포획 현상은 구조적 포획, 인지·문화적 포획, 직업적·존재론적 포획, 담론적·정치적 포획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현상 기술이 아니라,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된 한국 저널리즘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구조적 포획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가 언론의 편집권과 수익권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현상을 가리킨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직접 취재나 기사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뉴스 유통의 흐름과 노출 순위를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편집권과 게이트키퍼 기능을 대체하고 있

다(김위근, 2021; 허진성, 2009; 황성기, 2007). 그 결과 언론은 자사 플랫폼에서 독립적 편집권을 행사하기보다 포털의 검색어, 트래픽, 클릭수 등 관심경제(attention economy) 지표를 중심으로 뉴스 생산 방향을 맞추게 되었다(류현정·장우정·유진우, 2014). 이 과정에서 포털은 뉴스의 공익적 가치보다 시장성과 소비자 반응을 우선하는 상업적 유통 플랫폼으로 변모하였고, 언론은 공적 담론의 생산자가 아닌 뉴스상품 공급자로 전락하였다. 나아가 반 다이크(van Dijck et al., 2018)이 말한 바와 같이, 포털 플랫폼은 공공영역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의 장으로 작동하며, 저널리즘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인지·문화적 포획은 한국 언론이 포털을 단순한 유통 통로가 아닌 뉴스 생산의 연장선 혹은 대체 공론장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술 환경을 ‘중립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응적 태도와 효율성 중심의 업무 관행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비판적 자기 인식 능력을 약화시킨다. 맥루언(McLuhan, 1964)은 기술이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마비시킨다고 분석하며, 이를 “나르시시즘적 감각마비(narcissistic numbness)”라고 불렀다. 이는 오늘날 한국 기자들이 포털 중심의 기술 환경 속에서 포털을 언론의 연장선으로 오인하고, 포털 중심의 뉴스 생산 시스템을 ‘디지털 혁신’으로 착각하는 문화적 마비 상태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인지적 포획은 언론인으로 하여금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인 공익성·비판성·자율성을 희석하고, 기술적 효율성과 노출 극대화의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직업적·존재론적 포획은 기자들이 포털 생태계 속에서 자율적 행위자에서 플랫폼 종속적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을 의미한다. 김수지(2021)는 “뉴스 유통 권력이 포털로 넘어가는 순간, 기자는 포털의 장기판의 말이 된다.”라고 지적하며, 기자의 직업적 정체성과 저널리즘 노동의 본질적 위기를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사들은 포털용 ‘온라인

기자'를 고용하여 클릭 수 중심의 기사 생산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과지표에 따른 경쟁 속에서 번아웃과 실존적 허무감에 시달리고 있다(최영재, 2022). 김상호(2021)는 이를 “복제된 기사와 저널리즘 노동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포털뉴스 생태계가 기자를 자율적 창작자가 아닌 생산성 지표의 하위노동자로 전락시켰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나 아렌트(Arendt, 1958)가 『인간의 조건』에서 구분한 인간 활동의 세 범주—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중 기자들이 더 이상 ‘작업’이나 ‘행위’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언론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생존을 위한 반복적 ‘노동’에 매몰된 상태와 유사하다. 포털은 공론장이 아니라 뉴스상품의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자유의 주체’에서 ‘노동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었다(최영재, 2022).

넷째, 답론적·정치적 포획은 포털 중심의 상업화된 뉴스 유통 구조가 정치보도의 탈맥락화와 정파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포털의 알고리즘은 자극적이거나 분열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며, 정치기사를 클릭 경쟁의 대상이자 소비재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사라지고, 정파적 갈등과 감정적 언어가 포털뉴스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포털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아니라, 정파적 뉴스상품이 소비되는 폐쇄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한국 언론은 민주적 공론장의 조성자가 아닌 사회 분열을 재생산하는 매개체로 전락하였다(최영재, 2022).

요컨대, 한국 언론의 포털 포획은 단순한 기술적 의존이 아니라, 언론의 제도·문화·직업·담론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 포획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공론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기모순적 상황을 낳고 있다.

<표 1> 한국 언론의 '포털 포획' 현상 분석 요약

범주	핵심 내용 (포획 양상)	구체적 영향 및 사례
<p>① 구조적 포획 (Structural Capture)</p>	<p>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구조로 인한 편집권·수익권의 중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가 포털의 알고리즘과 클릭 지표에 종속됨</li> <li>- 뉴스가 공공재가 아닌 <b>상품</b>으로 거래됨</li> <li>- '관심경제' 지표가 기사 품질을 결정</li> <li>- 언론의 자율적 편집권이 포털에 이전됨</li> </ul>
<p>② 인지·문화적 포획 (Cognitive/Cultural Capture)</p>	<p>기술 승배와 효율성 담론 속에서 언론·포털 경계가 붕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들이 포털을 '언론의 연장선'으로 오인</li> <li>- 포털 중심 뉴스 생산이 공론장 기능 약화 초래</li> <li>- '디지털 혁신' 담론이 저널리즘 가치의 내면적 종속으로 전환</li> <li>- 언론인 스스로 기술 환경에 맞춰되어 포획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li> </ul>
<p>③ 직업적·존재론적 포획 (Professional/Ontological Capture)</p>	<p>기자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포털의 장기관 말'로 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자·디지털뉴스팀의 번아웃, 실존적 무력감- '기레기' 담론 확산과 기자직 명예 추락</li> <li>- 포털 논리에 맞춘 기사 생산이 기자의 정체성과 윤리를 붕괴시킴</li> <li>- 기자들이 자유로운 '언론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노동'에 매몰됨</li> </ul>
<p>④ 담론적·정치적 포획 (Discursive/Political Capture)</p>	<p>포털뉴스의 상업화로 정치기사의 탈맥락화·정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십·공격성 기사 확산, 공적 토론의 실종</li> <li>- 포털 알고리즘이 강화하는 <b>인지적 필터버블</b>현상</li> <li>- 합리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숙의의 붕괴</li> <li>- 정치기사가 상업적 소비재로 변질되어 공공적 가치 상실</li> </ul>

#### 4.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포털 포획'에서 'AI 포획'시나리오와 대응방안

포털 플랫폼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에서 AI 플랫폼 생태계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한국 언론은 과거 '포털 포획'이 초래했던 저널리즘 위기를 'AI 포획(AI Capture)'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반복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뉴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의존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익성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포획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그리고 그것이 한국 언론의 규범·윤리·조직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AI 포획'이 단순한 기술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을 침식시키는 구조적 종속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문제1] AI 포획의 개념과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기존의 포털 포획과 어떤 구조적 연속성과 차별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2] 한국 언론은 어떤 조직적·윤리적 경로를 통해 AI 기술 도입 단계에서 포획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가? 또한 언론의 자율성과 규범이 AI 생태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침식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AI 포획을 극복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한국 언론의 AI 포획 또는 포획 극복 시나리오 탐구)

[연구문제3] AI 포획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론 규범·윤리·거버넌스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언론의 포획 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질적 사례분석과 언론의 AI 포획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을 취

한다.

1단계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AI 도입 사례, 포털-언론 관계, 뉴스 자동화 실험 등의 2차 문헌과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여 ‘AI 포획’의 구조적 징후를 도출한다. 2단계에서는 ‘포털 포획’의 역사적 경험을 이론적 프레임으로 삼아, AI 포획 심화와 포획 극복의 가능성 시나리오를 연속성과 변형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3단계에서는 언론학·정책학·기술윤리학 관점을 종합하여, AI 포획 예방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AI 포획’ 현상을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조직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포털 포획’ 담론을 확장하여 AI 인프라 종속을 언론 자율성 침식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분석함으로써, AI 시대 저널리즘의 새로운 자율성 회복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AI 구조에 포획되지 않고, AI 도구를 통해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생존 전략임을 전제하며, 법·제도·산업·윤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자율적 언론의 지속가능성 모델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 II. AI 뉴스생태계에서 언론의 ‘AI 포획’ 문제

### 1. 포획 이론(capture theory) 검토

‘포획 이론(capture theory)’은 규제 기관이 불균형적으로 더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규제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공감하거나 지지하게 되어 규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경제학 용어에서 유래했다.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의

저술 '경제 규제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1971)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 규제 당국이 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그 후, 역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Stiglitz, 2017)는 '언론 포획(media capture)'의 개념을 경제학적 규제 포획 이론에서 확장하여 체계화하였다. 언론 포획(media capture)이란 사회를 대신해 감시해야 할 대상(정부, 기업, 정치세력 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언론을 '포획'하거나 사실상 '인질로 삼는' 상황을 말한다. 스티글리츠는 언론이 사회적 감시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포획이 그 기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는 언론 포획을 (1) 소유 포획(ownership capture), (2) 재정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 (3) 검열(censorship), (4)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소유 포획은 언론이 특정 기업이나 정치권력에 의해 직접 소유될 때 발생하며, 이는 편집의 독립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재정적 포획은 광고, 구독, 접근권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보도가 왜곡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검열 포획은 정부나 기업의 압력에 의한 자기검열을 포함하며, 언론이 스스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지 포획은 기자나 편집자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피감시 대상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권력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가장 미묘하고 위험한 형태로 설명된다. 스티글리츠는 2008년 금융위기 보도 실패를 인지 포획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언론이 금융권의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경고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17, pp.12-13)는 인터넷 시대 이후 언론의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전통적 언론의 수익 구조를 급격히 약화시켜, 저널리즘이 더 이상 사회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새

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은 탐사보도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심층적 보도를 지속할 자원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저널리즘이 공공적 책무보다 노출도와 참여율 등 상업적 지표에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언론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플랫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위 행위자로 전락한다.

스티글리츠는 또 다른 변화로,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이 자신이 이미 믿는 정보만 접하게 되는 ‘에코체임버’ 현상을 들고 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언론이 균형성과 신뢰성보다 특정 독자 집단의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언론은 다양한 시각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보다, 특정 집단의 신념과 시장 세그먼트에 맞춰 자기강화적 정보생산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로써 언론은 스스로 공공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권력과 자본의 인식 틀을 재생산하는 인지적 예측 상태에 빠지게 된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 시대 언론이 민주적 견제 기능을 잃어가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규정한다.

네슈타이(Nechushtai, 2018)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뉴스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특히 Google과 Facebook)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al capture)’ 이론을 통해 해석한다. 스티글러의 기존 규제 포획 이론은 규제 기관이 감독 대상 산업에 의해 포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금전적 유인(예: 금전 거래, 인사 회전문)이나 인지적·문화적 영향(예: 가치 공유, 정책 옹호)으로 이루어진다. 네슈타이는 이러한 이론을 확장하여, 기업이 이제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자신을 감시해야 할 비정부 기관(즉, 언론)까지 포획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Google과 Facebook은 언론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구조적으로 종속시킬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플랫폼들은 온라인 뉴스의 주요 트래픽 공급자이며, 뉴스 제작 도구·분석 및 인사이트 틀을 제공하고, 스토리 도달 범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언론 조직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al capture)'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을 낳는다. 즉, 감시 기관으로서의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리적·디지털 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포획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포획은 뉴스 콘텐츠의 독립성과 품질뿐 아니라, 언론이 전통적으로 보장받아 온 법적 보호의 자율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언론이 '감시자(watchdog)'가 아니라 플랫폼의 '종속 사용자(client)'로 전락하는 현상을 낳는다.

사이몬(Simon, 2022; 2024)은 네슈타이의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e capture)" 개념을 적용하여, 상용 AI 도구에 대한 의존이 어떻게 언론사의 편집 자율성을 침식시키는지 설명하였다. 사이몬은 AI 기술이 결합된 뉴스룸에서 이러한 포획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하였다. AI 기반 기사 작성, 개인화 추천, 자동 검증, 뉴스 요약 등의 기능이 대부분 외부 AI 도구(오픈AI, Google, Anthropic 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의존(dependence)은 언론이 AI의 설계 논리나 데이터 편향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AI 인프라에 포획된 언론(AI-captured media)'이라는 상태를 초래한다. 그는 기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뉴스 조직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in-house) AI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imon, 2024).

이러한 관점에서, AI 포획은 기존 포획 이론의 '기술적 진화형(technological evolution)'으로 이해된다. 즉, 기존의 정치·경제 권력이 아니라, 기술 인프라와 알고리즘 의존성이 언론의 자율성을 침식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로 작용한다.

언론의 AI 포획의 주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Simon, 2022; 2024 참조).

- (1) 기술 인프라 종속(Technological Infrastructure Dependence): 언론사가 자체 AI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외부 대형 모델(LLM,

API)에 의존함으로써, 알고리즘 설계나 편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 이는 편집 판단, 뉴스 가치, 콘텐츠 우선순위가 기술기업의 로직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 (2) 경제적 포획(Economic Capture): AI 기술 도입 비용과 데이터 처리 인프라가 막대한 탓에, 언론은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계약을 통해 기술 사용권을 확보하지만, 그 대가로 데이터 접근권과 수익 구조를 양도한다.
- (3)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 언론인들이 AI 기술의 효율성과 생산성 담론을 내면화함으로써, 저널리즘의 윤리적 판단 대신 기술적 ‘정확성’과 ‘속도’를 가치 기준으로 삼게 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AI 자동요약 도구의 산출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사화하거나, 속도 경쟁에서 AI 초안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관행이 나타난다.
- (4) 규범적 포획(Normative Capture): 언론이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외부 기술기업의 ‘AI 윤리 원칙’과 호환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자율 규범의 실질적 효력이 약화된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AI 포획은 단순한 기술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구조적 자율성과 민주적 감시 기능의 위기를 의미한다. AI가 뉴스 생산과 유통의 모든 단계에 통합됨에 따라, 언론은 기술적 효율성과 상업적 생존 논리에 포섭되고, 공적 책임과 투명성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따라서 ‘언론의 AI 포획’은 언론 자유의 새로운 위협 구조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정치·경제적 포획을 넘어서는 기술 인프라 기반의 비가시적 지배형태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민주주의의 질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 2. 'AI 포획'과 '포털 포획' '미디어 포획'의 차이점

AI 기술에 의한 언론 포획은 전통적 미디어 포획(Stiglitz, 2017)이나 포털 포획(Nechushtai, 2018)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가시적·비인격적 기술 포획의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 미디어 포획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에 의한 명시적 통제, 즉 소유·재정·검열·인지 포획을 통해 이루어졌다면(Stiglitz, 2017), AI 포획은 알고리즘과 인프라스트럭처의 기술적 의존성을 통해 자율성을 제약한다(Simon, 2022).

이러한 포획은 언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술 시스템의 논리에 종속되는 점에서, Nechushtai(2018)가 정의한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al capture)”과 개념적으로 맞닿아 있다. 특히, 포털 포획이 뉴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노출의 불균형에 기초했다면, AI 포획은 뉴스 생산 단계의 자동화와 편집 과정의 알고리즘화를 통해 심층적 통제를 행사한다.

Simon(2022)은 이러한 변화가 “게이트키퍼의 공유화(shared gatekeeping)”를 초래하며, 인간 편집자의 판단이 AI 시스템과 공동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는 포털 포획이 플랫폼-언론 간 수직적 권력 관계를 전제한 반면, AI 포획은 기술-언론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asymmetric interdependence)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Stiglitz(2017)의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이 기자가 권력의 담론을 내면화하는 사회적·심리적 과정이었다면, AI 포획의 인지적 양상은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데이터 편향을 통해 발생하는 비의식적 구조적 포획이다. 이러한 포획은 언론인의 가치판단을 직접 왜곡하기보다, 뉴스의 선택·배치·추천 과정에서 ‘기계적 객관성(mechanical objectivity)’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담론을 강화한다. 즉, 포획의 행위 주체가 인간에서 기술로 이동하며, 영향력의 범위 또한 특정 국가·매체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차원으로 확장된다.

AI 포획의 또 다른 차별점은 시간성과 규모성이다. 기존 미디어 포획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AI 포획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적 반응성을 통해 순간적이고 동적으로 나타난다(Simon, 2022; Molla & Ahsan, 2025).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기사 요약이나 편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각적·언어적 패턴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면, 이는 언론의 편집 관행 전반을 재구성하는 장기적 구조적 포획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음 <표 2>은 전통적 미디어 포획, 포털 포획, AI 기반 언론 포획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전통적 미디어 포획, 포털 포획, AI 포획의 비교

구분	전통적 미디어 포획	포털 포획	AI 포획
포획 주체	정부, 재벌, 광고주	포털 플랫폼기업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AI 개발사·데이터 인프라 제공자
작동 매커니즘	소유권·광고·검열·인지 포획	뉴스 유통 알고리즘·검색 노출 통제	알고리즘적 게이트키퍼·자동화·데이터 의존
의존 구조	재정적·정치적 의존	유통 인프라 의존	기술 인프라·데이터 인프라 의존
포획 특성	명시적·가시적	반가시적·계약적	비가시적·비인격적·자동화
주요 위협	편집 독립성 훼손	뉴스 다양성 축소 뉴스상품화	언론 자율성·인지적 다양성 침식
영향 범위	국내 미디어 산업	플랫폼 내부 뉴스 생태계	글로벌 AI 생태계 전체
대표 이론가	Stiglitz (2017)	Nechushtai (2018)	Simon (2022), Molla & Ahsan (2025)

### 3. 언론사들의 AI 포획 심화 vs.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

#### 가. AI 포획 심화 시나리오: 포털의 재현, 인공지능의 포획

AI 포획 심화 시나리오는 포털 중심의 뉴스 종속 구조가 AI 플랫폼

생태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생성형 AI가 뉴스의 자동 작성, 요약, 배열, 배포 등 전 과정을 장악할 경우, 언론은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하청적 위치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Helberger, 2024; Deloitte, 2022).

기술적 측면에서 네이버,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및 국내 빅테크는 뉴스 콘텐츠의 원천 생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과 게이트키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언론이 독립적 수익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채 AI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AI사용료' 또는 '콘텐츠 학습 데이터 보상금' 형태의 종속적 수익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클릭 수 대신 AI노출·추천 순위 경쟁이 새로운 관심 경제(attention economy)의 핵심 지표로 대체된다(류현정·장우정·유진우, 2014).

조직 차원에서는 기자의 직업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축된다. AI가 기사 작성과 편집,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자는 단순 검수자나 입력자로 전락하고 저널리즘의 전문적 영역(jurisdiction)은 붕괴될 수 있다. 윤리적으로도 공익성, 독립성, 책임성과 같은 저널리즘 규범은 AI 효율성과 상업성 논리에 밀려 주변화되고,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과 편향 문제는 뉴스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언론의 규범적 역할—공익성, 권력감시, 민주적 담론 형성—이 기술 효율성과 상업적 알고리즘에 포획된다(Stiglitz, 2017; Simon, 2022). 알고리즘적 게이트키퍼는 인간 편집자의 의제 설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뉴스 편집 권한이 AI 시스템과 공유되는 “공유된 게이트키퍼(shared gatekeeping)” 구조를 형성한다. 클릭률과 체류시간 중심의 참여 지표가 우선되면서, 공익적 뉴스보다 감정적·선정적 콘텐츠가 확산된다.

또한 플랫폼 의존성과 기술적 락인(lock-in)은 언론의 인프라 권력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게 만든다.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의 가격 정책·데이터 접근 제한·컴퓨팅 파워 독점은 언론의 자율적 기술 활

용 능력을 저해한다. 이 과정에서 편집 결정은 자동화되고, AI가 제시하는 최적화 지표에 따라 기사 노출 순서가 정해진다. 공익성보다 효율성이 우선되는 데이터주의적 저널리즘(data-driven journalism)이 강화되며, AI 편향(bias)과 훈련데이터 불균형은 저널리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구조적으로 잠식한다.

AI 기업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 언론의 규범적 중개자(normative intermediary)로 부상하고 있다. 그들은 데이터·알고리즘·인프라를 통해 언론의 윤리적 판단 구조를 재정의하며, 저널리즘의 가치체계를 기술 논리로 대체한다. 언론사들은 기술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통제권을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기자의 편집권과 탐사 능력, 그리고 제도적 자율성이 약화된다고(McKee, 2023).

결국 AI 포획 심화 시나리오에서 한국 언론은 기술 효율성에 예속된 언론노동체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이는 공공성의 약화, 자율성의 붕괴, 그리고 민주적 정보 질서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나.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 AI와 공존하는 자율적 언론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는 AI 기술을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미래 경로를 제시한다. 핵심은 기술을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언론이 스스로 AI의 설계자이자 비판적 이용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Opdahl et al., 2023) 서머필드 외 (Summerfield et al., 2025)의 ‘AI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도, “AI는 인식론적·물질적·근본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여러 도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를 강화할 기회 또한 제공한다. 따라서 과도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과 지속적인 제도·기술 설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언론사 연합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공동 LLM(거대언어모델) 구축은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 된다(이성규,

2023). 이러한 공공적 기술 인프라는 플랫폼 의존성을 줄이고, 언론이 자율적 AI 뉴스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AI는 기사 자동화보다는 팩트체크, 데이터분석, 오류 탐지, 검증 보조 등 공익적 기능에 집중되어야 하며(Adami, 2023), 이를 통해 언론은 기술 효율성을 민주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AI콘텐츠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통해 언론-플랫폼 간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탐사보도, 해설, 해석 중심의 고부가가치 저널리즘을 강화함으로써,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중심의 언론 영역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Meliana, 2025)<sup>11)</sup>.

조직 차원에서는 기자의 AI리터러시(AI literacy) 함양과 직업윤리 재정립이 요구된다. AI가 수행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비판적 사고, 공감, 창의적 판단—을 중심으로 기자의 전문성을 재설계해야 한다(Beckett, 2023). 이러한 역량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 AI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언론인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윤리·규범적 측면에서는 'Responsible AI Journalism' 원칙을 수립하여 알고리즘 투명성과 데이터 공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AI 거버넌스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언론의 규범적 자율성 보장 장치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언론·학계·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다층적 구조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EU의 AI Act와 UNESCO의 '윤리적 AI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한국형 공공 AI 인프라와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언론의 대체자가 아닌 자율적 저널리즘 복원의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의 핵심은 기술을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11) 로이터, AP 등 글로벌 뉴스통신과 뉴욕타임스와 BBC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언론사들은 AI 플랫폼 회사들과 콘텐츠 라이선싱 및 저작권 계약을 맺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ProRata와 같은 신규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수익 분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AI검색에서 답변을 생성할 때마다 기여한 출처에 대해 마이크로페이먼트(약 CPM 10달러)와 50-50 수익 분배를 제안한다.

전환하고, 언론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기술 시스템 속에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술과 규범, 산업과 윤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AI는 언론의 신뢰 회복과 민주적 정보 질서 강화를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표 3〉 AI 포획 심화 vs.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 비교

구분	AI 포획 심화 시나리오 (포털의 재현, 인공지능의 포획)	AI 포획 극복 시나리오 (AI와 공존하는 자율적 언론)
핵심 개념 및 방향성	포털뉴스 종속 구조가 AI 플랫폼 생태계로 재현되어, 기술과 알고리즘이 언론의 자율성을 대체	언론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며, 기술을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의 도구로 전환
기술·인프라 구조	빅테크의 폐쇄형 AI 인프라 및 API 의존, 기술 락인 심화	공영·공동형 LLM 구축, 투명하고 분산된 AI 인프라 확보
뉴스 생산·편집 체계	생성형 AI가 기사 작성·편집 전 과정 통제, 알고리즘 중심 게이트키퍼 강화	AI는 팩트체크·데이터 분석 등 보조적 역할, 인간 편집자의 공익 판단 복원
경제·수익 구조	AI사용료·데이터 보상금 의존형 수익 모델, 광고 중심 시장 강화	콘텐츠 라이선스 제도 도입, 탐사·해설 중심의 고부가가치 저널리즘 확립
조직·노동 구조	기자의 역할이 단순 검수·입력 노동으로 축소, 전문직 정체성 붕괴	AI리터러시 기반 기자 재교육, 인간 중심의 창의적 저널리즘 강화
저널리즘 규범 및 윤리	효율성과 상업성 중심, 공익성과 책임성 약화	Responsible AI Journalism 원칙 확립, 윤리·투명성·책임성 강화
데이터·편향·거버넌스	서구 중심 데이터 편향 재생산, 불투명한 알고리즘 구조	편향 교정 알고리즘 도입, 공공 데이터 거버넌스 제도화
정책·제도 환경	빅테크 중심 규제체계, 국가의 공공 통제 부재	정부·언론·학계·시민사회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주권 확보
결과 및 전망	언론의 자율성·공공성 붕괴, 민주적 정보 질서 약화	기술과 윤리의 공존, 언론의 신뢰·자율성 회복 및 민주주의 강화

### Ⅲ. 'AI 포획'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규범적 대응 전략

#### 1. '포획' 이론 vs. '규범' 이론

'미디어 포획(media capture)'은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공익성, 독립성, 객관성, 신뢰성 등의 핵심 규범 가치를 체계적으로 훼손하는 현상이다. 포획은 단순히 외부 압력에 의한 통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지적·기술적 종속을 통해 언론의 내적 규범 구조를 잠식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윤리 위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익성과 진실성의 훼손이다. 미디어 포획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실 추구하고 공공선 실현이라는 저널리즘의 근본 목적을 약화시킨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17)가 지적하듯, 포획된 언론은 사회의 감시견(watchdog)이 아니라, 감시해야 할 대상의 이해를 반영하는 중개자로 전략한다. 그 결과, 공익적 탐사보도는 감소하고, 부패와 불공정 행위가 은폐될 가능성이 커진다.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와 '럭스 리크스(Lux Leaks)'와 같은 국제협력 탐사보도는 이러한 포획의 반대 사례로서, 공익적 정보 공개가 사회적 투명성을 회복시키는 핵심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둘째, 자율성과 독립성의 침식이다. 언론의 독립성은 감시 대상인 정치권력과 시장으로부터의 거리 유지에 기반한다. 그러나 포획은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언론이 권력·자본의 의제에 포섭되도록 만든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는 포털, 유튜브 등 상업적 플랫폼이 뉴스의 유통을 지배함으로써, 언론의 편집 자율성과 제도적 독립이 약화된다(Schiffrin, 2018). 언론이 플랫폼의 수익 모델과 알고리즘 논리에 종속될수록, 공익 보도보다 트래픽과 참여도를 우선시하는 구조가 고착된다. 이로 인해 언론은 '포획된 시장'에서 자율적 의제 설정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객관성과 균형성의 훼손이다. 포획된 언론은 보도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보다, 감시 대상의 관점을 재생산한다. 스티글리츠

(Stiglitz, 2017)는 이를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이라 부르며, 언론인과 편집자가 권력 엘리트의 언어와 세계관을 내면화함으로써 비판적 거리를 상실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디지털 전환 이후 이러한 인지 포획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언론이 기술 플랫폼의 알고리즘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면서 공익보다 효율성과 즉시성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 결과 언론은 스스로 포획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권력의 시각을 재생산하는 ‘인지적 예속 상태’에 빠지게 된다.

넷째, 신뢰성과 책임성의 약화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성 저하와 에코체임버 현상이 결합하면서, 언론은 특정 집단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집단 소속(group affiliation)’ 중심의 시장 논리를 강화함으로써, 언론이 특정 독자 집단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보도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공통된 사실 인식이 약화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분열된다. 점차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매체를 “이미 포획된 언론”으로 인식하게 되며, 결국 언론 전반에 대한 공적 신뢰 기반이 붕괴된다.

요컨대, 미디어 포획은 언론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독립성-객관성-신뢰성의 네 가지 규범 축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구조적 현상이다. 이는 언론이 감시 대상과 동일한 가치체계를 내면화함으로써 비판적 자율성을 상실하는 인지적·제도적 종속의 과정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윤리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표 4〉 ‘미디어 포획’ 작동방식과 언론 규범 훼손 현상

구분	침해되는 규범 가치	작동 메커니즘	결과 및 영향
공익성과 진실성	진실 보도, 공공성, 사회적 투명성	권력·자본의 이해 대변, 탐사보도 축소, 정보 비공개	감시견 기능 약화, 부패 은폐, 공공성 실현 저하
자율성과 독립성	편집 자율성, 제도적 독립성	정치·경제 권력 및 플랫폼 구조에 대한 종속	자율적 의제 설정 능력 상실, 시장·권력 의존 심화

객관성과 균형성	비판적 거리, 다양성, 균형성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 엘리트 담론 내면화	권력의 관점 재생산, 공익보다 효율성·속보성 우선
신뢰성과 책임성	사회적 신뢰, 책임 윤리	에코체임버, 참여도 중심 뉴스 모델, 상업화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 붕괴, 언론의 정당성 약화

AI 포획은 언론의 기술포획, 인프라포획 현상으로서, 저널리즘의 규범적 기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비가시적 기술 종속 과정으로 작동한다. 첫째, 공익성과 진실성의 훼손은 알고리즘적 게이트키핑을 통해 발생한다. AI 시스템은 클릭률, 체류시간 등 참여 지표에 최적화된 뉴스를 우선 배치하여 사실성보다 자극성과 감정적 호소를 강화한다(Simon, 2022; 2024). 이로 인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약화되고, 민주적 담론 형성이 왜곡된다.

둘째, 자율성과 독립성의 침식은 플랫폼 의존과 기술적 락인(lock-in) 구조에서 비롯된다. 언론은 구글, 오픈AI,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의 AI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며, 컴퓨팅 자원·데이터 접근·수익 모델 등이 플랫폼 통제 아래 놓인다(Simon, 2022). 그 결과 언론의 편집권과 뉴스 생산 주권이 점차 상실되고, 자율적 의제 설정이 어려워진다.

셋째, 편집 책임성과 윤리적 판단 능력의 약화는 자동화된 편집 결정과 불투명한 알고리즘 구조에서 나타난다. AI 시스템이 기사 노출과 추천을 결정하면서 기자의 윤리적 판단과 공익적 우선순위는 점차 후퇴한다. 또한 데이터 출처와 알고리즘 작동 원리에 대한 비공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언론의 공적 신뢰를 저해한다(Simon, 2022).

요컨대, AI 포획은 기술 효율성과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언론의 공익성, 자율성, 윤리성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5〉 ‘AI 포획’ 작동 방식과 언론규범 훼손 현상

저널리즘 규범 가치	‘AI 포획’ 작동 메커니즘	언론 규범 훼손 결과
공익성, 사실성, 민주적 담론	알고리즘적 게이트키퍼, 클릭률 중심 추천 시스템	자극적·감정적 콘텐츠 확산, 공익적 의제 약화, 민주적 공론 왜곡
편집 자율성, 제도적 독립성	플랫폼 의존, 기술적 락인(lock-in), 인프라 권력	편집권·데이터 주권 상실, 플랫폼 논리에 따른 뉴스 생산 구조화
윤리적 판단, 투명성, 책임성	자동화된 편집 결정, 불투명한 알고리즘, 데이터 출처 비공개	공익 판단 약화, 편집자의 역할 축소, 언론 신뢰도 하락

결국 언론이 미디어 포획과 AI 포획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 규범을 실제로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포획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의존이 점점 커지면서 언론의 내부 원칙이 흔들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공익성·자율성·책임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실천은 언론이 기술 효율성보다 민주적 책임과 공적 신뢰를 우선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된다. 결국 언론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규범과 원칙을 얼마나 일관되고 성찰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 2.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AI 기술의 규범적 활용 모색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언론계의 관심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AI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AI 기술의 설명 불가능성, 초지능화 가능성 등 불안과 경계의 반작용으로 ‘윤리적 AI’, ‘신뢰할 수 있는 AI’, ‘인간 중심 AI’ 등 선언적 규범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을 저널리즘의 가치와 규범을 증진하

는 선용(善用)의 방향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학계의 연구가 기술 중심적 논의에 치우쳐, 저널리즘의 규범성과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뒤따른다.

유럽 언론학계에서는 'AI 저널리즘'보다는 '저널리즘적 AI(Journalistic AI)'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이는 언론의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로 인해 언론의 가치·정체성·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Lin & Lewis, 2022, p.1629).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 위에서 AI의 규범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린과 루이스(Lin & Lewis, 2022)는 "AI가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The one thing journalistic AI just might do for democracy)"에서, 뉴스의 정확성(accuracy), 접근성(accessibility), 다양성(diversity), 관련성(relevance), 시의성(timeliness) 등 언론의 규범적 뉴스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AI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언론이 기술 의존을 통해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al capture)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이 AI 기술 기업의 자원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 유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양질의 저널리즘은 사회적 양극화와 정보 왜곡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그 규범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가디언지(The Guardian)가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흑자로 전환하고, 노르웨이 주요 일간지들이 공공 저널리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성공한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Opdahl et al., 2023). 또한 BBC는 탐사보도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Jones et al., 2023), 2024년 풀리처상에서도 뉴욕타임스의 AI 활용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AI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언론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지만, 양질의 저널리즘을 보장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저널리즘의 질은 기술적 도입보다 독립성, 공익성, 윤리성 등 제도적·규범적 기반에 달려 있다. AI 기술은 기자들이 반복적 업무에서 벗어나 탐사보도와 비판적 분석 등 본질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반

면,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편향(bias), 환각(hallucination), 데이터 소유권 및 책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AI에 의한 완전한 뉴스 자동생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AI는 인간 기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저널리즘의 윤리 강령을 실천하도록 보조하는 기술적 동반자로 활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기술의 규범적 활용은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신뢰와 공익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뉴스 조직은 이를 제도적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최선의 AI 뉴스 윤리 강령(best AI practices)’을 공개적으로 채택하고 내외부의 검증을 받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Opdahl, 2023, p.13).

### 3. 언론 조직의 협상력 제고와 콘텐츠 혁신 전략

언론이 AI 포획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업과의 협상력 제고와 콘텐츠 혁신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언론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기업과의 협력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 했으나, 이러한 의존은 언론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술기업의 통제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오픈AI 등 생성형 AI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언론은 외부 기술을 수용할 때, 단순한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협상 주체로서 기술 품질과 조건을 검증하고, 공정한 협력 규칙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Helberger, 2024).

AI 기술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사 웹사이트와 플랫폼이 대형 포털이나 생성형 검색보다 더 참여적이고 지능적인 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독자와의 직접 관계를 강화하고, 독립 언론이 더 나은 정보의 공급자임을 보여주는 노력이기도 하다. 실제로 AP와 AJP는 AI를 기자의 대체가 아닌 보조 도구(tool)로 한정하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공공성·윤리성·저널리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Ingram, 2023).

한편, AI 기업과의 데이터 이용 및 저작권 협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CNN 등 주요 언론사들은 GPT봇 접근을 차단하거나 약관을 변경해 자사 콘텐츠의 무단 학습을 방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이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캘리포니아 언론보존법(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에 반발해 뉴스 게재를 중단한 사례에서 보듯, 빅테크의 대응은 강력하다. 이에 언론사들은 공동 교섭체 구성과 국제적 연대 전략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AI 솔루션 지원 및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고도화가 뉴스 생산·검증·유통의 전 과정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BBC, 뉴욕타임스(NYT), AP, 로이터 등 글로벌 언론사는 AI를 기자 중심의 품질 강화 도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판단·책임·편집 철학을 중심에 두고, AI를 탐사보도·사실검증·데이터 분석·콘텐츠 자동화의 '인지적 증강 장치(cognitive augmentation)'로 통합하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들은 AI를 기자 중심의 품질 강화 도구로 통합하는 전략적·탐사보도·콘텐츠 혁신의 세 방향에서 대응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BBC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AI를 '창의적·윤리적 혁신 수단'으로 규정하고, AP와 로이터는 인간-기계 협업을 핵심으로 한 자동화·번역·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NYT는 탐사보도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AI를 결합해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

탐사보도와 사실검증 분야에서는 BBC OSINT와 NYT의 전쟁 및 정치 탐사 사례, AP Verify와 로이터 Lynx Insights의 데이터·영상 분석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AI를 통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사실 검증과 패턴 탐지를 자동화하며 탐사보도의 범위와 정밀도를 확장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유통 차원에서는 BBC, NYT, AP 등이 기사 자동화, 의미 기반 독자 매칭, 멀티포맷 전환 등으로 생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악시오스, 더 밀크 등 대안 미디어는 해석력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인간 고유의 저널리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혁신들은 AI를 인간 기자의 대체물이 아니라 인지적 증강 장치(cognitive augmentation)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공익성을 유지한 채 품질 중심의 저널리즘 생태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 4.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AI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오픈AI, Google, Microsoft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뉴스 생산과 유통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언론은 점차 AI 인프라 포획(infrastructural capture)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종속은 언론의 편집 자율성과 제도적 독립성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언론 자유(media freedom)를 잠식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AI 기술기업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기술 거버넌스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범적·법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Ingram, 2023; Helberger et al., 2024).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AI법(AI Act),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 등 일련의 법안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여전히 AI 인프라의 불투명성과 알고리즘 통제에 비대칭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뉴스룸 내에서 데이터 처리, 추천 시스템, 자동 기사 작성 등 핵심 기술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내부 구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은 더 이상 독립된 감시 주체라기보다, 기술 인프라 제공자의 논리에 종속된 하위 행위자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포획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적 AI 인프라 구축(public AI infrastructure)을 통해 상업적 플랫폼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 EU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셋, 오픈소스 모델, 공정 접근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좋은 본보기이다. 둘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를 위해 AI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출처, 훈련 과정,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공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공정 접근(equal access) 원칙을 제도화하여, 언론이 기술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기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van Drunen, 2025).

EU의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AI법(AI Act)은 이러한 규범적 접근을 제도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특히 AI법은 '고위험 시스템(high-risk systems)' 범주에 언론 관련 AI 응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적 결정이 미디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미디어 자유법은 언론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공공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AI 인프라의 독점적 통제를 견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언론 자유는 콘텐츠 차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넘어 인프라 접근의 권리(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nfrastructure)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AI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는 단순히 기술적 감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 책임성,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 설계의 문제다. 따라서 향후 거버넌스는 기술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 인프라 구축, 독립적 규제기구의 설치를 통해, 언론이 AI 포획의 구조적 위협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신뢰에 기반한 자율적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포털 포획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위기를 경험한 한국 언론이, 인공지능(AI) 기술 중심의 새로운 뉴스 생태계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종속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혁신 실패 이후 포털 플랫폼에 종속된 한국 언론이, 이제 AI 기반의 뉴스 생산 도구와 기술 인프라를 외부 플랫폼 기업에 의존할 경우,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더욱 심층적으로 침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I 포획(AI capture)”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이 맞이한 새로운 기술 의존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포획을 극복하기 위한 언론의 규범적·제도적 대응 전략을 탐색하였다. 연구는 스티글리츠(Stiglitz, 2017)와 사이몬(Simon, 2022)의 미디어 포획(media capture) 이론을 토대로, AI 포획의 개념과 작동 메커니즘, 포획 과정 시나리오를 검토하였으며,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언론 자율성과 민주적 감시 기능을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AI 포획의 개념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포획 또는 포털 포획이 정치권력·시장·플랫폼 기업의 명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면, AI 포획은 기술 인프라·알고리즘 구조·데이터 종속이 매개하는 비가시적·비인격적 포획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술 종속 현상을 구성한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은 AI 포획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언론의 편집권·데이터 권한·윤리적 판단 체계를 외부 기술 구조에 이양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AI 포획은 포털 포획의 연속선 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력은 더 심층적이고 전면적이며, 뉴스 생산·배열·유통의 모든 단계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갖는다.

연구문제 2에서는 한국 언론의 조직적·윤리적 취약성이 AI 포획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디지털 전환 실패 이후 ‘포털 의존’을 정상 상태로 받아들인 한국 언론은, 효율성 중심의 기술 수용, 편집권의

약화, 기자 직업성의 축소 등 포획의 여러 조건을 이미 내면화하고 있다. AI 기술을 검증 없이 도입할 경우, 이러한 취약성은 알고리즘적 게이트키퍼, 기술적 락인(lock-in), 데이터 주권 상실과 결합하여 AI 포획의 가능성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언론의 자율적 규범 형성이 외부 AI 윤리 원칙에 종속되는 “규범적 포획” 또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AI 포획의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의 규범적 실천 전략을 탐색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 방향은 언론이 AI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탐사보도·팩트체크·데이터 분석 등 양질의 저널리즘과 민주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AI를 ‘규범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즉, AI는 효율성과 자동화의 수단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공익성·진실성·책임성을 확장하는 기술적 동반자이자 인지적 증강(cognitive augmentation)의 도구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영·공동형 LLM 구축과 같은 기술 인프라 자립과 데이터 주권 확보, AI기반 뉴스콘텐츠 혁신 전략과 기자·편집자의 AI 리터러시 향상 등 조직역량 강화, 그리고 공정한 저작권·데이터 라이선스 확립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적 기반 조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는 AI 포획 개념이 한국 언론의 디지털 전환 실패를 진단하는 새로운 분석 틀이자, AI 시대 저널리즘 자율성 회복을 모색하는 규범적 방향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는 저널리즘 위기의 새로운 원인이자 잠재적 해결책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며, 기술 활용 방식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은 약화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도입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이 AI를 어떤 규범적·제도적 철학 아래에서 활용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한국 언론은 포털 포획의 경험을 단순히 ‘과거의 실패’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AI 포획 위험을 사전에 경계하고 기술의 민주적 설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지니며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AI 포

획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산업 구조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향후 기술 변화와 규제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는 개념적 분석과 선행 사례 검토에 집중하였고, 실제 한국 언론사의 AI 도입 과정에 대한 실증 자료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해외 주요 언론사의 AI 활용 실태는 비교적 풍부하게 검토했으나, 국내 언론의 실제 기술 도입 역량·조직 구조·윤리 체계는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보다 폭넓은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사의 AI 도입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AI 기반 편집 시스템의 영향 분석, 언론인 대상 인식 조사, AI 포획이 편집권·윤리·공론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분석 등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AI 포획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설계 연구, 공공적 AI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 언론·독립 언론의 기술 자립 모델 연구 등은 향후 중요한 연구 의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정치·경제·사회 담론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AI 포획을 민주주의 이론·플랫폼 거버넌스·데이터 주권 논의와 연결하는 다학문적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 포획 개념을 통해 한국 언론이 직면한 새로운 기술적 의존 구조를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AI 시대의 저널리즘은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기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회적 정당성을 능동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 언론이 AI 포획의 위험을 경계하고, 포획되지 않는 기술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다면, AI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재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상호 (2021). 복리뷰: 〈인간의 조건〉 정치의 계절에 한나 아렌트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 〈신문과 방송〉, 통권 610호, 69-73.
- 김수지 (2021, 10, 1). 우리는 또 플랫폼의 장기 말이 될지 모른다.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15831>
- 김영욱·이은주 (2005). 〈위기의 한국 신문: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 한국언론재단.
- 김영주·정재민 (2011). 〈신문기업의 혁신경영: 저널리즘, 비즈니스, 조직구조〉.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위근 (2021). 〈포털뉴스서비스의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균·권영전·박주현 (2019). 〈AI 시대의 저널리즘: 로봇 기자와의 '고군분투' 실무 체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류현정·장우정 (2014, 10, 20). 포털 공화국을 연 새 리더십, 이해진 네이버 의장 ③. 〈조선비즈〉. UR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0/2014102002685.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0/2014102002685.html)
- 박아란·이나연·신혜린 (2024). 〈생성형 AI 시대 언론사와 언론인의 역할 재정립〉 (연구보고서 2024-01).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종문 (2023). 영남일보, 'AI 이미지 솔루션' 어떻게 개발했나. 〈관훈저널〉, 66권 1호, 94-101.
- 이성규 (2023). 챗GPT 등 생성AI와 저널리즘: 과정과 실재를 구분하여 기자에 미칠 영향 파악하기. 〈관훈저널〉, 65권 1호, 201-208.
- 이종혁·임종섭 (2012). 〈한국 신문의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전략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현우·조성동·이상규 (2024). 〈뉴스룸 인공지능 도입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서 2024-04).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영신 (2014). 여덟 개의 키워드로 읽는 뉴욕 타임스 혁신 보고서. 〈해의 미디어동향〉, 한국언론진흥재단.
- 천현진 (2023). 페루자에서 보는 저널리즘의 미래: AI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문과 방송〉, 통권 631호, 64-68.
- 최영재 (2022). 포털뉴스생태계와 기자직종의 위기: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

- 는가. <언론과 사회>, 30권 3호, 93-134.
- 최영재 (2024). <공영방송과 대통령권력: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과 언론 규범론>. 한림대학교 지식미디어센터.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한국신문의 미래전략: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 허진성 (2009).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의 연구. <언론과 법>, 8권 2호, 237-262.
- 황성기 (2007). 뉴스매개자로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197-232.
- 황용석·김대경 (2012). 뉴스룸의 내외적 자원융합에 관한 연구: 통합뉴스룸과 수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73-106.
- Adami, M. (2023). Is ChatGPT a threat or an opportunity for journalism? Reuters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news/chatgpt-threat-or-opportunity-journalism-five-ai-experts-weigh>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역) (2017). <인간의 조건>. 한길사.
- Becker, K. B., Simon, F. M., & Crum, C. (2025). Policies in parallel? A comparative study of journalistic AI policies in 52 global news organisations. *Digital Journalism*, 1-21. URL: <https://doi.org/10.1080/21670811.2024.2431519>
- Beckett, C., & Yassen, M. (2023). *Generating change: A global survey of what news organizations are doing with AI*.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Deloitte. (2022). *The future of news: An analysis of developments, scenarios and initiatives to increase the value of news in 2030*.
-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URL: <https://doi.org/10.2307/2095101>
- Helberger, N., van Drunen, M., Moeller, J., Vrijenhoek, S., & Eskens, S. (2024). Towards a normative perspective on journalistic AI: Embracing

- the messy reality of normative ideals. *Digital Journalism*, 10(10), 1605-1626.
- Helberger, N. (2024). FutureNewsCorp, or how the AI Act changed the future of new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52, Article 105 915.
- Ingram, M. (2023, July 20). AI, the media, and the lessons of the past. *Columbia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s://www.cjr.org/the\\_media\\_today/openai\\_deals\\_ap\\_ajp.php](https://www.cjr.org/the_media_today/openai_deals_ap_ajp.php)
- Ioscote, F., Gonalves, A., & Quadros, C.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 journalism: A ten-year retrospective of scientific articles (2014-2023). *Journal of Media*, 5(3), 873-891.
- Lin, B., & Lewis, S. C. (2022). The one thing journalistic AI just might do for democracy. *Digital Journalism*, 10(10), 1627-1649.
- McKee, D. (2023). Uncontrollable: The threat of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nd the race to save the world. Independently published.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김상호 (역) (2011).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Meliana, P. (2025). Can AI pay for the news it uses? Publishers are testing 3 models. *Martech*. Retrieved from <https://www.contentgrip.com/ai-publishers-crawl-fees/>
- Molla, M. A. M., & Ahsan, M. M. (202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urnalism: A systematic bibliometric and thematic analysis of global research (No. arXiv:2507.10891). arXiv. URL: <https://doi.org/10.48550/arXiv.2507.10891a>
- Nechushtai, E. (2018). Could digital platforms capture the media through infrastructure? *Journalism*, 19(8), 1043-1058. URL: <https://doi.org/10.1177/1464884917725163>
- Newman, N. (2023, January 10). 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2023.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Newman, N., & Cherubini, F. (2025, January 9). 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2025.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Opdahl, A. L., Tessem, B., Dang-Nguyen, D. T., Motta, E., Setty, V.,

- Throndsen, E., Tverberg, A., & Trattner, C. (2023). Trustworthy journalism through AI. *Data & Knowledge Engineering*, 146, 102182.
- Schiffrin, A. (2018).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media capture. *Journalism*, 19(8), 1033-1042. URL: <https://doi.org/10.1177/1464884917725167>
- Simon, F. M. (2022). Uneasy bedfellows: AI in the news, platform companies and the issue of journalistic autonomy. *Digital Journalism*, 10(10), 1832-1854.
- Simon, F. M. (2024). Escape me if you can: How AI reshapes news organizations' dependency on platform companies. *Digital Journalism*, 12(2), 149-170.
- Stigler, G.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
- Stiglitz, J. (2017). Toward a taxonomy of media capture. In A. Schiffrin (Ed.), *In the service of power: Media capture and the threat to democracy*.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Media Assistance.
- Summerfield, C., Argyle, L. P., Bakker, M., Collins, T., Durmus, E., Eloundou, T., Gabriel, I., Ganguli, D., Hackenburg, K., Hadfield, G. K., Hewitt, L., Huang, S., Landemore, H., Marchal, N., Ovadya, A., Procaccia, A., Risse, M., Schneier, B., Seger, E., ... Botvinick, M. (2025). The impact of advanced AI systems on democracy. *Nature Human Behaviour*, 1-11. URL: <https://doi.org/10.1038/s41562-025-02309-z>
- van Dijck, J., Poell, T., & de Waal, M. (2018). *The platform society: Public values in a connectiv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runen, M. Z. (2025). Safeguarding media freedom from infrastructural reliance on AI companies: The role of EU law. *Telecommunications Policy*, 49(7), 102990.
- Wilson, H. J., & Daugherty, P. R. (2018). Collaborative intelligence: Humans and AI are joining forces. *Harvard Business Review*, 96(4), 114-123.

**ABSTRACT**

---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I Capture' in Korean Journalism

Choi, Young Jae  
Professor, Hallym University

This exploratory study investigates whether Korean news organizations, which have already experienced structural dependence on portal platforms, may replicate similar patterns of technological dependence in the emerging generative AI-driven news ecosystem. The analysis starts from the concern that Korean media have struggled to build sufficient autonomous technological capacity because of delayed digital innovation. Consequently, these organizations may encounter greater constraints on editorial autonomy and public-interest journalism when they rely on external AI models, data, and infrastructure. Using Stiglitz's (2017) theory of media capture, along with Nechushtai's (2018) and Simon's (2022) discussions of infrastructural capture, the study conceptually def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AI capture," and traces both its continuities with and differences from the earlier phenomenon of portal capture. The study identifies the organizational and normative pathways that make Korean media vulnerable to AI-based dependence and examines regulatory and ethical approaches to reduce these risks. It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I capture in Korean journalism and suggests preliminary strategies to protect media autonomy in the evolving AI

news ecosystem. This research, situated in the early stage of the AI news ecosystem, provides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otential capture dynamics and highlights that AI technologies may threaten media autonomy while also offering opportunities for its restoration. Although exploratory, the study contends that the current transitional period is a critical time to design institutional safeguards for media autonomy in the AI era. To avoid renewed “AI capture,” Korean media should adopt a dual strategy: first, ensure infrastructural protections, such as access to AI infrastructure, strengthened data sovereignty, and algorithmic transparency; second, promote the normative use of AI for public-interest functions, including fact-checking, verification assistance, and error detection. Future research should develop specific policy frameworks and institutional design principles to guide the AI-driven news ecosystem toward a democratic information order based on autonomy and responsible AI use. This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proactive institutional design to ensure that AI integration in journalism supports democratic values and media independence.

Keywords: AI capture, infrastructural capture, journalism autonomy, AI-driven journalism, portal platform capture, media ethics, normative response

[ 논문투고일 2025. 10. 26. 논문수정일 2025. 11. 23. 게재확정일 2025. 11. 27.]